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국 단위 협의체 출범 ‘주목’

광주 113개 단체 ‘비상행동’ 발족
각계 목소리 모으고 국민적 연대
‘6월 항쟁’ 이끈 ‘국민본부’ 가능성
오늘 지역 단체별 투쟁 방향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전국 단위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연합체를 정식 출범하고 서울 등 전국의 운동단체와 연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10일 오후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발족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후 ‘윤석열 퇴진 광주시국대성회 추진위’라는 이름의 연대조직을 통해 활동을 펼쳐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윤석열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을 구성한 바 있다.

기우식 광주비상행동대변인(광주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명칭을 변경하고 공식 발족식을 가진 것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과 이어진 정국의 혼란에 따라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서다”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이름의 범국민적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 광주비상행동이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전체대표자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과거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도 전국적 구심점 결성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사례가 있다. 고(故)박종철 열사의 사망과 4·13 호헌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촉발된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야당 통일민주당을 주축으로 각 사회운동 세력과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 등이 연계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했다. 국본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범국민적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6월 민주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전국 단위 협의체 구성의 관건은 지역 단체별 방향성의 정립이다. 광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온 덕에 지역 내

연합조직의 방향성과 요구사항이 확고한 반면, 특·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의 전국 조직은 거리 등의 문제로 지역단체 간의 견결집이 비교적 어려운 탓이다. 광주비상행동 등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단체들은 11일 서울에서 모여 구체적인 투쟁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비상행동 발족식에서는 경과 보고에 이어 조직구성과 운영·향후 대응 방향 논의, 발족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사태가 야기한 헌정 중단 상태 종식을 위해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동조

세력과 함께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국민에게 충구를 겨는 내란 수괴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며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며 “내란 공모·동조세력도 즉각 체포해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배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무산시킴으로써 헌정 중단 상태를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정당임을 선언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민은 이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한덕수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함께 진행한 내란의 주범이며, 한동훈은 권력을 분점할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한 자”라며 “국가 수사본부는 권력 찬탈을 통해 내란수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수립하려는 한 대표와 한 총리를 체포·구속 수사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내각 총사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며 “냉전 이념에 사로잡힌 퇴행적 국정 기조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았다. 통치기간 내내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을 갈가리 찢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는 이런 실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총칼로 제압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사회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윤석열정권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탄핵안 재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매일 오후 7시마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광주전남시도민 총궐기대회를 다음주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장흥서 태국국적 불법체류자 부부 2쌍 붙잡혀

불법체류자 부부들이 마약투약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장흥경찰은 태국 국적 3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불법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4시40분께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장흥군 대덕읍 한 주택으로 출동해 이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확인 결과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인근 농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정상아 기자**

무면허 음주사고 후 도주한 50대 ‘입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100m가량을 도주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지인이 렌트한 차량을 빌려 대신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금메달리스트 출신 LH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임대주택 조성 관련 뇌물 요구 기소
“단순히 빌린 돈…대가성 없었다”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 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0일 204호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LH에서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수용·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고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LH공사 전북본부에서 토지 수용 보상과 분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심각한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해당 금액을 요구했다고 판

단했다. 그러나 A씨는 “금전 요구가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빌린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6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번의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다. 선수 은퇴 후 LH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임됐고, 관련 행정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민현기 기자**

국민 105명,尹 상대 전국 첫 집단소송 나서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제기
“위헌적 비상계엄에 국민 공포”

위헌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 선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나섰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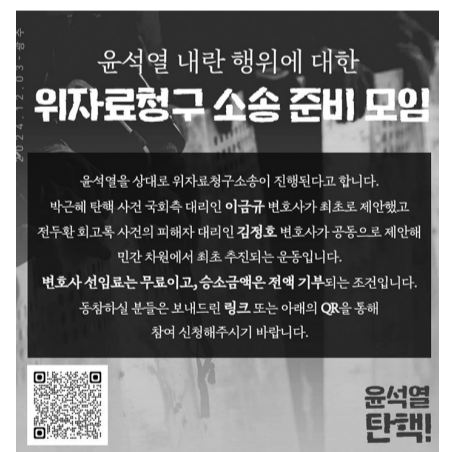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시도했다며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참여를 원하는 국민 105명이 원고로 나섰다. 원고의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결정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은 지역별로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울산·전북·경북·충남·제주 각 1명 등이다. 나머지 원고 1명은 홍콩에 거주 중인 교포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탄핵소추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이들은 청구 소송 제안을 통해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 당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질러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저버렸다”며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불편과 자존감 저하,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국민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승소할 경우 실비(인자·송달료)를 제외하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